

부마민주항쟁과 서울중심주의*

- 광주와 부마(釜馬)의 운명적 결합, 그리고 그 반동에 대하여 -

박 대 현**

1. 서론
2. 서울중심주의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타자화
3.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중앙언론의 보도 현황과 태도 분석
 - 1) 중앙언론의 서울중심주의와 지방의 식민화 현상
 - 2) 부마민주항쟁의 보도 통계량과 취재 수준
4.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서울중심주의적 전유 방식
 - 1) '부마'와 '광주'의 운명적 결합과 그 반동으로서의 지역감정 정치
 - 2) 서울의 6월항쟁 독점과 부마·광주에 대한 도착적 발상
5. 결론

<국문초록>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의 가치와 의의는 서울의 관점에서 감산되고 배제되어왔다. 그 결과 부마항쟁은 지역적 항쟁으로 폄하되었으며, 5·18항쟁은 6월항쟁의 성취에 종속됨에 따라 광주라는 장소는 피학살과 죽음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정신으로 끝내 이루어진 6월항쟁의 결실(87년 체제)이 서울중심주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다. 6월항쟁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된 전 국

* 이 논문은 2023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논문에 대한 의견을 세밀하게 개진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 분 심사위원께서는 4장의 지면을 꼭 채울 정도로 많은 의견을 서술해주셨다. 처음 겪는 호사였다. 감사드린다.)

** 문학평론가, 독립연구자(daehyunp@hanmail.net)

민적인 항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6월항쟁의 정신사적 의미는 부산과 광주를 분리시키는 지역감정 정치를 통해 서울중심주의적으로 독점되었다. 그 결과 부마항쟁은 3·15마산의거처럼 지역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고, 5·18항쟁 또한 그 자체의 항쟁사적 성취는 서울중심주의적 6월항쟁의 의미에 종속되고 말았다. 따라서 부마항쟁의 항쟁사적 의미의 복원은 한국민주화운동사를 바라보는 서울중심주의적 시각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운명적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서울중심주의,
1960년 봄혁명

1. 서론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60년 2월의 대구 학생시위가 4월혁명의 시발점이었고, 혁명의 구체적 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 3·15부정선거 직후의 마산 시위다. 4월혁명은 영남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지막으로 4월 19일 서울에서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학계에서 파악한 객관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은 4·19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4·19혁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날 서울 지역의 다수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지역 대학생 중심의 역사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김태일 교수는 ‘4·19혁명’이라는 명명법을 서울중심주의라 비판했으며, 그 대안으로 ‘1960년 봄 혁명’을 제안한 바 있다.¹⁾ 4월혁명을 서울이 독점해가는 과정을 보면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민주화운동사는 지역의 중요성에도!

1) 김태일, 「2·28과 1960년 봄 혁명」(4월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10.4.19.); 김태일, 「2·28운동은 1960년 봄 혁명의 출발」, 『매일신문』, 2017.2.27.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7022704383726766>, 검색일: 2023.7.11.)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가치와 의의가 서울의 관점에서 감산되고 배제되어온 것이다.

이는 1979년 부마항쟁²⁾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를 향한 대학생들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시작된 시민 항거다. 10·26 사태를 촉발시켜 박정희 장기 집권을 종식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뿐만 아니라 12·12사태로 재등장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격렬한 저항인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재규의 거사가 없었다면 5·18광주의 비극에 앞서 부마항쟁의 비극이 참혹하게 발생했을 개연성마저 존재한다. 부마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역사의 비극적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충분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이한 현상은 부마항쟁과 5·18항쟁 정신을 계승한 6월항쟁의 결실(87년 체제)이 서울중심주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다. 5·18광주의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중앙언론을 통해 서울중심주의적으로 독점되었고, 광주를 향한 여타 지역의 부채의식이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6월항쟁의 역사적 평가에 내재된 서울중심주의의 실체다. 그 과정에서 부마항쟁은 3·15마산의거처럼 지역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고 충분한 역사적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중심주의는 한국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작용한다.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지역의 의미가 퇴색해왔듯이 지역민주화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민주화운동을 조명하는 중앙 매체의 보도 실태와 보수 정권의 지역감정 정치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 논문은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결락되고 만 원인을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 항쟁으로부터 촉발된 역사적 변혁과 결실들이 서울중심주의의 항쟁사적 맥락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역 항쟁의 의미가 폄훼되고 망각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식적인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이지만, 표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간단히 ‘부마항쟁’으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5·18민주화운동’도 ‘5·18항쟁’으로 표기한다.

2. 서울중심주의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타자화

서울중심주의적 역사관 속에서 배제되고 망각된 역사적 사건은 부마항쟁만이 아니다. 4월혁명조차도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이 망실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4월혁명은 1960년 2·28대구학생의거, 3·15마산의거, 전북대 4·4의거, 그리고 4월 18일 고려대 시위와 4월 19일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4월 25일 서울 시내 교수들까지 참여한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에 사임 성명을 발표한다.

4월혁명은 당시에 4·19혁명 이외에도 2·28혁명, 3·15혁명, 4·26혁명 등으로 불렸다. 혁명의 명칭이 각축을 벌이다 4·19로 암묵적으로 결정된 것은 서울과 대학생이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독점하게 된 사정을 말해준다. 즉 4·19혁명이라는 명칭은 서울과 대학생 중심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4·19’라는 명명에 의해서 2·28과 3·15, 혹은 아예 여기에 끼지 못하는 전북대 4·4의거의 역사적 의미는 혁명 드라마의 조연이나 단역으로 전락하고 만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4월혁명에서 최초의 대학 시위는 마산의 해인대를 제외하면 전주의 전북대에서 시작되었다.³⁾ 2·28의 대구 학생들, 3·15의 마산 학생들, 4·4의 전주의 대학생들 이후에야 서울의 대학생들이 혁명 대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4·19라는 명칭을 통해 혁명을 독점하고 그 주체성마저도 장악하고 만 것이다. 한국민주화운동사의 서울중심주의의 예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4월혁명의 주체성은 서울의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4·19 세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마산, 부산, 전주(전북대)의 지역성을 소거하고 서울과 대학생, 즉 서울의 대학생으로 정립되어왔다. 이후 4·19혁명 대신 4월혁명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⁴⁾, 4월혁명 역시 서울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명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써 근래의 연구들은 대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하층민과 여성, 그리고 지역으로 혁명의 주

3) 김환표, 「전북대학교 4.4시위와 4.19혁명」, 4월 학생혁명 50주년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2010년 4월 5일).

4) 강만길의 『4월혁명론』(한길사, 1990), 사월혁명연구소의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2』(한길사, 1990), 임규찬·최원식의 『4월혁명과 한국문학』(창비, 2002) 등이 있다.

체성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왔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 대신 ‘4·19’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풍토가 일부 식자층에서 발견되고 있으며,⁶⁾ 4월혁명의 명칭을 ‘1960년 봄 혁명’으로 수정하자는 김태일의 주장은 허황된 것으로 여겨졌는지, 이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오랫동안 전무한 실정이다.⁷⁾ 4월혁명을 둘러싼 서울중심주의는 비판적 성찰의 대상조차 아닌 것이다.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부마항쟁이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실체와 정신성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의문이 지역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⁸⁾ 부마항쟁의 망각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부마항쟁의 망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망각, 둘째, 부마항쟁 당사자인 부산·마산시민으로부터의 망각이 그것이다.

첫 번째 망각의 차원. 부마 항쟁이 일반 시민으로부터 망각되어온 원인은 5·18항쟁이 1980년대의 지식인에게 미친 충격이 거의 절대적이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학살이 자행된 참혹한 역사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5·18항쟁은 1980년대 지식인들에게 한국민주화운동사의 절대적인 심연으로 자리 잡았다.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피살을 초래한 가져온 간접적인 계기이자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5·18항쟁은 현대사의 죽음충동(death drive)으로서 1987년의 6월항쟁을 불러온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부마항쟁의 기억 표상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폄훼와 망각이 6월항

5)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발간한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선인, 2010), 『지역에서의 4월혁명』(선인, 2010), 『혁명과 여성』(선인, 2010), 『4월혁명의 주체들』(역사비평사, 2020) 등이 있다.

6) 우찬제·이광호 편, 『4·19와 모더니티』(문화과지성사, 2010)가 대표적이다.

7) 국가가 지정한 4월혁명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4·19혁명’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8)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27호, 2011, 2쪽 참조.

쟁에 대한 서울중심주의적 전유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6월항쟁은 부마항쟁의 반복이고, 광주의 6월항쟁이 5·18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은 서울중심주의적으로 전유되어 왔다. 그리고 6월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서울중심주의로 기울 때, 광주를 향한 부채 의식의 해소는 서울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5·18항쟁이 이루지 못한 성취는 서울의 몫이 되고 만다. 이처럼 서울중심주의적으로 평가된 6월항쟁은 5·18항쟁과 강력한 항쟁사적 동맹을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탈락한 부마항쟁은 지역적인 사건으로 매몰당하고 만다.

두 번째 망각의 방향.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시민으로부터도 망각되어 온 것은 김상봉의 주장처럼 부산과 마산의 저항 주체들의 부끄러움 때문으로 볼 수 있다.⁹⁾ 부마항쟁 발생의 저류에는 4월혁명 이후 오랫동안 독재정권을 향해 저항적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부마항쟁 발생 직후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되고(1979년 10월 18일 0시) 마산에 위수령이 발동되자마자(1979년 10월 20일 0시) 부마항쟁은 곧바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피살과 12·12사태를 통한 신군부의 등장. 급기야 신군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인 5·18민주화운동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참혹한 죽음은 부마항쟁 시민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끄러움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된다. 시민적 주체로서의 부끄러움이 부마항쟁 발생의 한 동력이었다면, 신군부의 등장 이후 발생한 광주학살의 실상을 몰랐던 데서 오는 부끄러움은 부마항쟁의 시민적 주체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1990년 3당 합당으로 인한 정치적 보수화로 인해 부마항쟁의 기억이 무의식 깊숙이 봉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87년의 6월항쟁에서 부산의 시민적 저항이 매우 격렬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6월항쟁에서는 부마항쟁의 저항적 전통과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저항의 격렬함을 이끌었던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이 항쟁사적 담론 속에서 5·18의 비극과 더불어 부마항쟁을 역사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의미화하였다면, 부마항쟁이 지역 주민들로

9)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09 참조.

부터도 망각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부마항쟁에 대한 지역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¹⁰⁾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이 부산과 마산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망각되고 만 것은 결국 지역민의 주체성이 서울중심주의에 의해 식민화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즉, 서울중심주의로 인해 부마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지역민의 내면에서 대부분 소거되고 만 것이다. 이는 중앙언론의 서울중심주의의 영향도 자못 크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황용주와 이병주가 각각 주필로 있었던 부산의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논설은 중앙일간지의 오피니언을 주도했을 정도의 위상이 있었다.¹¹⁾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중앙 종속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지역민의 주체적 자율성과 독자성이 중앙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중앙에 종속화되는 경향이 강화되어온 것이다. 즉, 중앙언론과 중앙연구자의 인준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마항쟁에 대한 지역연구자의 연구와 지역 언론의 조명은 지역사의 가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서울중심주의의 마성(魔性)이 한국현대사의 심상지리를 왜곡시켜온 것이다.

3.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중앙언론의 보도 현황과 태도 분석

1) 중앙언론의 서울중심주의와 지방의 식민화 현상

중앙일간지가 지역 뉴스를 취급하는 데 소홀한 것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 노무현이 지방분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

10) 이에 대한 내용은 홍순권의 앞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1) 황용주는 1954년부터 부산에 진출하여 부산대 강사, 국제신문 논설위원을 맡았는데,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의 요청으로 부산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제신문은 대신 이병주를 영입한다. 이로써 부산의 양대 신문은 두 주필 시대를 통해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 김정환은 최중식, 이종률과 함께 이때 해직된 것으로 보인다.(안경환,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2013, 301~302, 357~358쪽 참조.) 지역적 전통으로 인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다른 지역의 지방 일간지와 달리 구독자 수에서 중앙일간지를 압도해왔으나, 서서히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형민, 「중앙지의 지방의제 보도에 관한 연구-〈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사설 분석을 통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8쪽)

한 참여정부 시기에도 중앙일간지의 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통계학적 수치로 나온 것이다. 중앙일간지가 수도 서울의 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다.¹²⁾

문형민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 1월~8월, 2006년 1월~8월 사이에 중앙일간지 1면의 지역 기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중앙'이 전체 기사의 68.1%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중앙일간지 1면의 지역성 분석에서 지방 관련 기사는 13.4%에 지나지 않으며, 해외기사의 18.5% 비율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었다. 사진 기사에서도 중앙 비율이 50.1%로 가장 많았고 해외가 35.1%, 지방은 14.7%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중앙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기사는 근접성 면에서, 해외기사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지방 기사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또한 지방의 중요한 의제를 중앙일간지의 사설에서 다루는 것 역시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중앙지 사설들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사안이 배제되고 있는 데는 어떤 규칙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의 주요 사안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려 따위가 무의미할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예컨대, 부산/경남권의 경우 사설에서 다루어진 비율이 1%이며, 중부권 1%, 대구/경북권 0.4%, 호남권 0.9%, 강원 0.3%, 제주 0.3%에 불과하다.)¹⁴⁾

지역을 다루는 중앙일간지의 보도 행태가 이러하다면,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지역민주화운동 역시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리에서 '광주항쟁'(1980.5.~1999.12.), '6월항쟁'(1987.6.~1999.12.), '부마항쟁'(1979.10.~1999.12.)를 검색하면 보도 건수가 다음과 같다.

12) 해외 언론의 지역 뉴스 보도 실태 조사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3) 이석수, 「중앙일간지의 지방뉴스 취급과 보도 성향-조선·중앙·경향·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0~82쪽.

14) 문형민, 「중앙지의 지방의제 보도에 관한 연구-〈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사설 분석을 통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1쪽.

- ‘광주항쟁’(1980.5.~1999.12.): 6,039건
[‘광주사태’ 12,757건, ‘5·18항쟁’ 2,807건]¹⁵⁾
- ‘6월항쟁’(1987.6.~1999.12.): 3,022건 [‘6·10항쟁’ 684건]
- ‘부마항쟁’(1979.10.~1999.12.): 223건 [‘부마사태’ 124건]

‘광주항쟁’을 ‘광주사태’로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검색하더라도 각각 12,757건, 124건이 나온다. ‘광주항쟁’(‘광주사태’)은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여준다. 문제는 ‘6월항쟁’과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은 ‘6월항쟁’에 비해서도 검색량이 매우 미미하다. ‘부마항쟁’ 223건, ‘6월항쟁’ 3,022건이다. ‘부마사태’로 검색하면 124건으로 더 적다. (‘6·10항쟁’은 684건으로 검색량이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6월항쟁이 주로 쓰였던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음이의어 등의 검색 오류로 인한 편차가 있겠으나, 이 정도의 차이라면 오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압도적인 격차라고 할 수 있다. 보도 내용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역언론과 달리 중앙언론의 보도는 주로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지역의 행사와 학계의 발표문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문다. 부마항쟁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한겨레신문’조차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¹⁶⁾ 이는 5·18항쟁과 6월항쟁에 대한 심층취재와는 결을 달리하는 보도 내용이다. 부마항쟁 보도가 부마항쟁 기념일의 지역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언론이 부마항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앙언론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2008년 10월 11일에서 10월 13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¹⁷⁾는 가히 충격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다. 부마항쟁에 대한 서울에서의 인지도가 1.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15) 오늘날 정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이지만, 당대에 주로 쓰인 명칭으로 검색하였다.

16) 예컨대, 부마항쟁 20주년을 소개하는 『한겨레신문』의 1989년 10월 22일자 7면 기사 ‘부마항쟁 역사적 재조명 작업 활발’이 그렇다. 이외의 기사들도 언론사 자체의 심층 취재는 잘 보이지 않는다.

17)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항도부산』 27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04~105쪽 재인용.

에서조차 5.4%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4월혁명(서울 40%, 부울경 38.5%)과 5·18항쟁(서울 50.4%, 부울경 44.5%)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6월항쟁과 비교하더라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계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 6월항쟁과 부마항쟁이 10% 미만의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서울(5.8%:1.9%), 부산/울산/경남(8.8%:5.4%)에서 보이는 인지도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최근의 영화 『1987』(장준환, 2017)은 그런 차이를 현격하게 벌려 놓았으리라 짐작된다. 박스오피스 723만명의 관람을 기록한 영화 『1987』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의 인지도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놓았을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1987』 역시 6월항쟁을 서울중심주의적으로 구성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6월항쟁사에서 지역의 역사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잘해야 단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6월항쟁의 지역 투쟁은 영화 아웃트로에 매우 소략하게 병렬 배치하고 있다.)

중앙언론의 보도 통계와 보도 내용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6월항쟁은 5·18항쟁을 서울중심주의적으로 전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마항쟁을 역사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봄 혁명’이 말해주고 있는 대구, 마산, 부산, 전북의 역사적 주체성이 ‘4·19혁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박탈되고 말았듯이, 부마항쟁 역시 학계와 언론의 행태로 인해 역사의 주인이자 주체로서의 정신성이 벗겨지고 만 것이다. 이로 인해 부마항쟁은 수도에서도 지역에서도 잘 기억하지 않는, 망각된 역사의 유령이 되고 말았다. 이는 10·26사태로 인한 부마항쟁의 전국적 확산 실패, 그리고 3당합당으로 인한 부마지역의 정치적 방향의 혼란에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중심주의가 널리 유포하고 확정하는 지방의 식민화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부마항쟁이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부마항쟁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중앙언론의 서울중심주의와 이에 대한 지역민의 종속성의 강화, 그리고 지방 식민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2) 부마민주항쟁의 보도 통계량과 취재 수준

논문 작성의 기초 작업을 위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부마민주항쟁’¹⁸⁾ (1979.10.~1999.12.), 5·18민주화운동(1980.5.~1999.12.), 6월항쟁(1987.6.~1999.12.) 등과 관련된 기사 검색량을 확인하였다.¹⁹⁾ 부마민주항쟁은 부마항쟁과 부마사태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항쟁, 광주사태, 5·18항쟁, 5·18 등으로도, 6월항쟁은 6·10항쟁, 6·29선언으로도 검색하였다.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정치적 입장과 맥락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1987년 이전 부마항쟁은 주로 부마사태로, 5·18민주화운동(1997년 5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며 이 명칭으로 통일)은 광주사태로 불렸다. ‘부마사태’는 ‘부마항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부마항쟁’ 통계량을 주목하고자 하며,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5월 이후야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으므로 폭넓게 사용된 ‘광주항쟁’ 검색량을 주목하고자 한다. (광주사태 역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므로 그 통계량은 단지 참고만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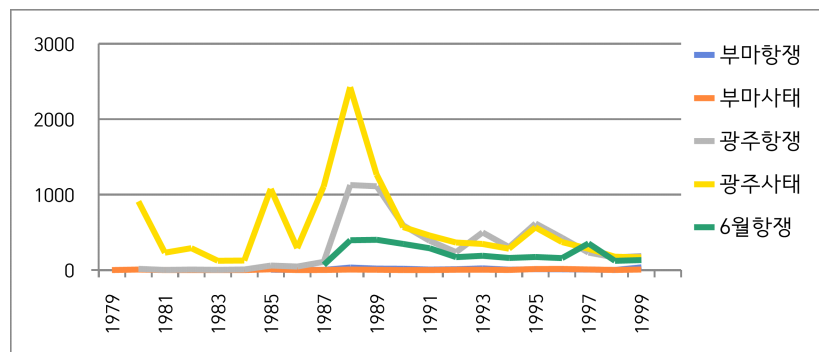
아래 통계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언론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통계를 통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언론이 가장 주목한 시민항쟁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민항쟁과의 비교선상에서 부마항쟁이 놓여 있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 2019년 9월 17일에 국무회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은 2019년 9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상복,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동북아연구』 35권 2호, 동북아연구소, 2020, 162쪽) 그러나 그 이전까지 부마민주항쟁은 주로 ‘부마항쟁’ 또는 ‘부마사태’로 불리어져 왔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검색어는 ‘부마항쟁’ 또는 ‘부마사태’로 한다.

19)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검색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후의 검색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2000년 이전까지의 검색량 추이는 부마민주항쟁 이후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비중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단, 2000년 이후의 부마항쟁 인식의 변화는 알 수 없으나, 2008년에 실시한 ‘부마항쟁’에 실시한 여론조사(본 논문의 3장 1항 참조)를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 부마항쟁(사태)·광주항쟁(사태)·6월항쟁 검색량

	부마항쟁	부마사태	광주항쟁	광주사태	6월항쟁
1979		1			
1980		8	17	911	
1981		1	3	231	
1982		1	8	291	
1983		1	4	124	
1984		1	9	127	
1985	6	11	61	1,077	
1986	4	1	48	291	
1987	4	2	110	1,109	68
1988	35	8	1,128	2,426	395
1989	21	5	1,112	1,267	401
1990	19	1	594	571	346
1991	8	1	389	459	289
1992	13	5	239	366	171
1993	24	6	500	347	189
1994	7	2	305	284	160
1995	14	15	619	567	173
1996	12	16	430	372	158
1997	8	9	233	284	353
1998	3	2	168	178	122
1999	38	8	188	169	132
총합계	216	105	6,165	11,451	2,957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까지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이 언론에서 언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87년 이전까지 ‘부마항쟁’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부마사태는 ‘사태’라는 어감이 말해주듯이 부정적인 소요 사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7년 이전 통계에서 부정적 어감의 부마사태 검색량이 부마항쟁보다 많은 것은 물론 신군부정권이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과 ‘광주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1987년 이전까지는 ‘광주사태’ 검색량이 ‘광주항쟁’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항쟁’과 ‘사태’의 검색량이 역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의 숨통이 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통계에서 매우 기이한 것은 부마항쟁의 검색량이 광주항쟁과 6월항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부마항쟁은 언론보도의 통계 수치를 통해서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마항쟁이 시민 대중으로부터 잊히고 만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부마항쟁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1980년대는 ‘부마항쟁’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10·26사태,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6·29선언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보도 통계량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부마항쟁이 무엇에 압도당했는지 알 수 있다.

〈표 2〉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관련 자료 검색량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합계
부마항쟁	25	61	21	107	214
부마사태	21	22	31	32	106
10·26사태	1,116	1,086	990	177	3,369
광주항쟁	889	1331	820	3,054	6,094
광주사태	3,132	3,560	3,010	1,693	11,395
5·18항쟁	451	622	396	1,234	2,703
6월항쟁	340	643	320	1,651	2,954
6·10항쟁	121	197	96	245	659
6·29선언	1,365	1,499	194	810	3,868

부마항쟁은 일차적으로 '10·26사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김재규의 저격에 의한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공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0·26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부마항쟁의 보도 건수를 압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항쟁(사태)에 대한 보도가 엄청난 건수를 보이고 있다. 부마항쟁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10·26사태로,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광주항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보도 횟수보다도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의 질적 수준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설, 칼럼, 심층 취재의 보도 건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3〉 부마항쟁(사태) 통계 자료

	한겨레			경향			동아			조선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1979												
1980							(1)					
1981				(1)								
1982												
1983					(1)							
1984				(1)								
1985												
1986											(1)	
1987											(1)	
1988	2(1)	1	7(2)		1	1		2			1	
1989		2	1(1)					1				
1990		3	1						1			
1991			2					1				
1992		2	1(1)			1(1)						
1993	1(1)	1	(1)				1	(1)	2(1)		1	
1994		1							1			
1995		2	1			(1)		2				
1996	1		(3)			(1)						
1997		2(1)										(6)
1998												(1)
1999	1	3(1)						1	1			
합계	5(2)	17(2)	13(8)	(2)	1(1)	2(3)	1(1)	7(1)	5(1)		2(2)	(7)

<표 4> 광주항쟁(사태) 통계 자료

	한겨레			경향			동아			조선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1980				(18)	(15)	1(5)	(10)	(19)	(7)	(10)	(7)	(1)
1981				1(8)	(4)	(1)	(5)	(4)		(5)	(6)	(9)
1982				(9)	(2)	(3)	(5)	(3)		(5)	(5)	(4)
1983				(2)	(3)	(2)	(3)	(3)	(2)	(3)	(2)	
1984				(1)		(4)		(1)	(1)		(5)	
1985				2(14)	(35)	1(8)	(20)	(36)	(16)	(20)	(20)	(6)
1986				(8)	(5)	(5)	(4)	(5)	(7)	(4)	(2)	
1987				(14)	(9)	2(17)	(15)	5(9)	(14)	(15)	1(20)	(4)
1988	35(14)	29(20)	54(31)	3(32)	6(19)	3(33)	13(42)	21(19)	9(22)	2(42)	10(30)	(16)
1989	52(27)	39(21)	28(14)	6(18)	14(25)	4(14)	8(39)	18(25)	19(22)	3(39)	5(18)	1(5)
1990	33(12)	31(12)	13(10)	1(5)	4(5)	(5)	3(5)	6(5)	11(9)	2(5)	5(1)	1(3)
1991	14(7)	14(9)	15(7)	2(2)	5(10)	2(24)	(4)	14(10)	4(13)	(4)	1(4)	
1992	9(7)	19(8)	16(13)		1(4)	3(5)		(4)	1(6)		3(4)	(3)
1993	20(5)	16(8)	9(10)	2(4)	8(7)	4(14)	2(4)	4(7)	5(26)	(4)	4(7)	
1994	2(6)	7(5)	8(2)	1(3)	5(5)	4(2)	2(4)	3(5)	2(9)	(4)	1(2)	
1995	13(10)	19(9)	17(8)	4(7)	9(12)	2(5)	9(3)	5(12)	3	(3)	5(8)	1(1)
1996	12(5)	16(8)	14(7)	2(4)	5(9)	(5)	1(3)	6(9)		(3)	2(3)	1(4)
1997	4(3)	15(6)	6(1)	1(3)	5(4)	(2)	1(5)	3(4)	(1)	(5)	1(4)	
1998	5(2)	13(3)	4(8)	2(2)	1(3)	(3)		3(3)			1(1)	
1999	1(3)	11(5)	2(1)		2(4)	1(1)	2	7(4)	1		3(2)	1
합계	200	229	186	27	65	27	41	95	55	7	42	5

<표 5> 6월항쟁 통계 자료

	한겨레			경향			동아			조선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1987							1	6	4			
1988	16	17	48		4	2	10	11	14	2	2	1
1989	34	32	20		10	6	8	11	15	1	1	2
1990	47	17	10		5		3	10	8	7	7	2
1991	20	18	14		8		2	12	5		3	
1992	12	17	11		3	3		5	3		4	
1993	6	13	7		4	1		2	3		2	

	한겨레			경향			동아			조선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사설	칼럼	심층
1994	6	6	6	1	1		3	5	2		3	1
1995	10	9	10		3	2	5	4			4	1
1996	6	16	15		3	2	2	1	3			
1997	9	17	3		8		1	4	8		1	
1998	1	7	4	1	2		1	2				
1999	2	13	5		2	1	1	5			1	3
합계	169	182	153	2	53	17	37	78	65	10	28	10

이상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부마항쟁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5·18항쟁은 1987년 이후에야 사설, 칼럼, 심층 취재의 보도 건수가 폭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1987년 6월항쟁과 그에 따른 민주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5·18항쟁은 1980년 이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므로 그 중요성은 압도적이다. 때문에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8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계속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마항쟁 관련 기사는 5·18항쟁과 6월항쟁에 비해 그 통계량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월항쟁이 있었던 1987년 직후인 1988년에야 한겨레 신문에서 심층취재 기사를 7회(부마사태 보도 건수 2회 포함하면 9회) 내보내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낮은 관심도라고 할 수 있다. 6월항쟁에 대한 보도 역시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1988년에서 1991년까지 집중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6월항쟁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마항쟁이 5·18항쟁과 6월항쟁에 비해 사설, 칼럼, 심층취재 보도 건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마항쟁이 언론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현저히 적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통계량 차이는 부마항쟁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송기인 신부는 다음과 같은 칼럼을 남긴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 ‘그날’을 제대로 기억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부마’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답은 듣지 않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우리에게는 기억력이 이다지도 약하단 말인가. 역사에 대한 망각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자. 제2의 박종철과 이철규, 조성만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부마민주항쟁은 지역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실증해 주었을 뿐 아니라 80년 5월 광주항쟁을 분수령으로 터져나온 민족민주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데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다.²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부마항쟁을 바라보는 시각, 아니 그러한 ‘시각’조차도 희귀해져버린 이유는 한국민주화운동을 서울중심주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마항쟁과 5·18항쟁을 서울중심주의적으로 전유해온 과정과 운동사적 논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서울중심주의적 전유 방식

1) ‘부마’와 ‘광주’의 운명적 결합과 그 반동으로서의 지역감정 정치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4월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중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부마항쟁이 붕괴시킨 박정희 정권은 한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성립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훨씬 넘어서는 독재 정권이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을 종식시킨 부마항쟁은 4월혁명이라는 민중항쟁의 전통을 부활시켜 1980년대 민중항쟁의 지평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²¹⁾ 부마항쟁은 5·18항쟁과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1980년대 항쟁사의 출발을 알리는 기원으로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평가는 대개 이와

20) 송기인, 「부마민주항쟁 교훈 ‘실종’」, 『한겨레신문』, 1989.10.22., 6면.

21)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276~277쪽.

같은 일치된 의견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봉은 민중항쟁사를 ‘능선’과 ‘봉우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5·18항쟁이 하나의 ‘봉우리’라면 부마항쟁은 봉우리를 향해가는 ‘능선’이라고 진술한다.

부산과 마산이 이어주는 항쟁의 능선은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비폭력 저항의 능선인데, 이 능선은 4·19와 부마항쟁을 거쳐 5·18에 이른다. 하지만 봉우리와 능선을 등수매기듯이 비교하고, 봉우리가 아니라 단지 능선이라 해서 그것을 봉우리에 비해 폄하한다면, 그것 역시 역사에 대한 몰상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능선이 없다면 봉우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²²⁾

김상봉의 이런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의 ‘결성선언문’을 보자. “우리 국민은 온갖 외세의 침략과 독재적 억압의 현대사 가운데서도 갑오농민전쟁, 3·1독립운동, 4월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존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대동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²³⁾ 이 선언문은 부마항쟁을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대동 세상’을 향해가는 도정으로서 5·18항쟁에 선행하는 항쟁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항쟁사적 측면에서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운명적 결합을 시도한다. 운명적 결합에 대한 성찰은 5·18항쟁이 부마항쟁을 항쟁사적 자기원인으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1989년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발간한 『부마에서 광주까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의 발간 의도는 다음과 같다.

민주와 반민주, 민족과 반민족이라는 모순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광주민중항쟁은 80년을 전후한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 철저히 재조명해야 함에 부마항쟁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관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2) 김상봉, 「응답하는 도시-항쟁사의 능선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부마민주항쟁 학술총서2-부마민주항쟁 이후 지역 민주화운동과 민주정치와 과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61쪽.

2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90313>, 검색일: 2023.10.13.).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비하여 부·마항쟁은 상대적으로 여러 현상적, 실체적 의미가 제대로 접근되지 못하고 또한 본질인식의 폭이 미약화돼있다는 점에 우리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부·마항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신독재의 붕괴, '서울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민주화 변혁시기, 그리고 핏빛의 총칼로 짓밟힌 광주민중항쟁과 이후 반외세자주화투쟁의 시발점이 되어지고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접근을 가능케 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및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등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는 민족사적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현 시기의 민족민주운동을 발전·강화시키는 데 일부분을 담당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였다.²⁴⁾(밑줄: 인용자)

부마항쟁을 향한 5·18항쟁의 호명은 한국민중항쟁사에 내재된 모종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그 운명이란 광주와 부마(釜馬)가 죽음의 은밀한 묵계(默契)로 얹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18항쟁이 “부마항쟁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관관계”라는 주장은 5·18항쟁의 죽음이 곧 부마항쟁으로부터 넘어온 것임을 암묵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마항쟁 직후 살해된 박정희, 정권의 몰락, 12·12사태, 그리고 5·18항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는 모종의 죽음이 개입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행되지 않은 죽음이 있다. 부마와 광주는 모면한 죽음과 자행된 죽음으로 이루어진 죽음의 공동체다.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 캄보디아에서처럼 2, 3백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집니다”²⁵⁾ 이와 같은 차지철의 말은 10·26사태로 실제 행동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박정희의 죽음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부산과 마산에 학살이 자행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인해 학살자의 역할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넘어갔으며, 동시에 피학살의 운명은 ‘부마’에서 광주로 넘어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명시하지 않았으나, 『부마에서 광주까지』는 죽음을 매개로 한 부마와 광주의 운명적 결합을 내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적 결합은 ‘부마’와 광주의 운명 공동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24)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부마에서 광주까지』, 샘물, 1989, 7쪽.

25)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3-1970년대 편』, 인물과사상사, 2003, 259쪽.

박광주는 그 운명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논자라고 할 수 있다. 박광주는 10·26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산과 마산이 차지철의 권고대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진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으며, 10·26사태로 인해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빚어질 수 있었던 유혈사태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현실화되었다”고 말한다.²⁶⁾ 다시 말해, 광주의 죽음이 곧 부마의 죽음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역사의 가정은 무망한 것이지만, 10·26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부마항쟁은 계엄령 이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학살의 만행이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광주와 부마는 죽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마항쟁이 참가자의 범위나 규모, 기간, 운동의 강도 등에서 5·18항쟁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갖는 운동사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²⁷⁾ 그러나 항쟁사적 관점에서 불행하게도,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운명적 결합은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가 먼저 ‘부마’를 향해 운명적 결합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는 그것에 화답하지 못했다.

광주가 ‘부마’를 호명했던 것은 5·18항쟁이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정복(서울대 교수·정치학)의 말처럼, 5·18항쟁은 “유신의 암흑정치 때 일어난 부산, 마산, 서울, 대전 등 각지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들에 의해 “광주지역의 특수한 운동”으로 고립되어 왔던 것이다.²⁸⁾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또한 5·18항쟁이 “민족전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계층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군부정권은 5·18항쟁을 “80년대초부터 특수지역의 특수사건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였고 “이는 당시 국민 전체의 전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민주화의 의지를 무시한 것이며 광주 문제 해결에 장애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²⁹⁾ 이처럼 5·18항쟁은 신군부 정권에 의해서 지역의 특수한 사건으로 폄

26) 박광주, 「부마와 광주의 전국화, 세계화」,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기획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2000, 127~128쪽.

27) 앞의 글, 130쪽.

28) 「‘5·18’은 민중항쟁운동 ‘민주화’ 성취 가교 역할」, 『동아일보』, 1995.5.18., 7면.

하되고 민주화의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왔던 것인데, 이것은 특히 '김대중·김영삼' 양 김 씨의 분열 속에서 광주정신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김영삼의 3당 합당으로 인한 부산·경남의 보수화와 보다 강화된 지역주의 정치³⁰⁾로 말미암아 부마항쟁이 지역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듯이, 5·18항쟁마저도 지역의 특수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광주는 지금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고향이자 자양분이었던 광주항쟁이 정작 민주화 이행기에 들어서서는 하나의 지역문제로 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5·18 학술심포지엄'에서도 광주항쟁의 지역화 현상은 핵심 의제였다. 이 토론회에서 '광주민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라는 주제를 발표한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민주화 이행이 어느정도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광주항쟁의 의미는 많은 변용을 겪어왔다. 광주항쟁의 국지화와 지역화를 통해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항쟁의 '지역화'는 여론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광주항쟁을 바라보는 광주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광주지역 응답자의 72.0%가 찬성한 반면, 비호남지역에서는 반대가 74.4%로 나타났다. 광주항쟁이 전국적 관심의 대상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다.

(중략)

그런데도 80년대 민중항쟁의 모델이자 저항세력들의 정당성을 공유

29) 「광주민주항쟁 10돌 <5>: 민주화 새 지평 연 '민중운동」, 『동아일보』, 1990.5.19.

30) 지역주의 발생의 잠재적 구조는 박정희 정권 시기의 지역 불균등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 이동과 사회적 계층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영호남 간의 대립적 정서가 5·18항쟁의 경험 속에서, 즉 가해자로서의 영남과 피해자로서의 호남이라는 인식 형태로 잠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본격적인 표출이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의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역주의가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 경쟁 구도의 지역적 재편과 이에 따른 정치적 동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2011, 181~182쪽.

하게 만든 정체성 형성의 근원이었던 광주항쟁이 왜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는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광주항쟁의 '지역화'라는 결과는 어디에서 연유할까.³¹⁾

'광주항쟁'이 발생한 '1980년 5월 18일'은,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광주항쟁'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획득하고 국가적으로 기념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이 '지역화'의 우려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부마항쟁이 항쟁사적 의미에서 소외되고 위축되어왔다면 '광주항쟁' 역시 '지역화'라는 굴레 속에서 항쟁사적 의미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광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추념되는 공식 명칭이 '광주'를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연유에도 '광주항쟁'을 둘러싼 지역화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주항쟁에 깃든 민주화투쟁 정신의 전국화가 쉽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역설적이게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에서 '광주'를 삭제한 것은 '광주항쟁'의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6월항쟁 이후 광주는 지역감정을 무기로 한 지배세력의 고립화 전략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광주항쟁'과 같은 지역 명칭을 지양하자는 의견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먼저 제기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³²⁾

이처럼 '광주'라는 지역명의 포함 여부 문제는 '광주항쟁' 전국화의 열망과 극우 보수 세력의 견제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광주'라는 명칭의 삭제는 광주의 전국화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5·18항쟁을 남파 북한군의 소행으로 간주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활개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광주'를 떼어낸 '5·18민주화운동'은 전국화와 지역화 사이 어디쯤 맴돌고 있는가.

31) 「광주는 왜 작아지는가」, 『한겨레신문』, 1997.5.14.

32)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 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125~126쪽.

5·18항쟁의 전국화가 억압돼왔던 것은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의 언론통제 뿐만 아니라 광주라는 기표에 빨갱이라는 기의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부당한 날조와 조작 때문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도 서울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지역감정의 본질은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조작된 착시 효과일 뿐이다. 본질은 서울과 지역의 은폐된 갈등이다. 최장집이 말했듯이, 영호남 사이의 지역감정은 한국적인 중앙집중화와 이로 인한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하나의 부수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역감정의 정치가 서울로의 초집중화 및 그에 따른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구조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이 중앙 대 지방의 대립 차원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의 대립 차원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이다.³³⁾

요컨대 최장집의 주장은 영호남의 사이의 지역감정으로 인한 대립이 서울 중심주의를 은폐한다는 것이다. 신군부의 정치적 계승자들은 광주정신을 폄훼하기 위해서 영호남의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동원하고 5·18항쟁의 운동사적 맥락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킨다. 지역감정을 통한 영호남의 분리는 곧 5·18항쟁과 부마항쟁의 분리와 다르지 않다. 5·18항쟁은 지역감정과 색깔론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고립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계기로 5·18항쟁과 단절된 부마항쟁의 정신사적 동력은 고사(枯死)하고 말았던 것이다.

2) 서울의 6월항쟁 독점과 부마·광주에 대한 도착적 발상

부마항쟁이 항쟁사적 구도에서 소외된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한 이는 조정관이다.³⁴⁾ 그는 부마항쟁의 소외 원인을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그가 분석한 객관적 조건은 두 가지다. ① 큰 역사적 파장을 남긴 5·18항쟁이 부마항쟁의 기억을 휩쓸어 버린 상황, ② 부마항쟁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은 붕괴하였으나 5·18항쟁의 ‘적’인 신군부 및 전두환 독재정권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5·18항쟁이 지속적으로 정

3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7~28쪽.

34)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1세기 정치학회, 2009, 91~93쪽.

치적·역사적 담론의 중심에 소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것이다. ①과 ②의 상황 속에서 부마항쟁은 정당한 역사적 기회를 받을 평가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주체적 조건은 5월 광주를 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투쟁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반면에 부마항쟁의 주체 세력은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미약하였고 더구나 1980년 초반의 부림 사건과 부산 미문화방화사건의 여파로 인해 항쟁 주체의 조직적 역량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김대중이 5·18항쟁의 정치적 기억과 추념의 구심점이 되었던 반면에 김영삼은 부마항쟁의 기억의 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1990년의 경악스런 3당 합당은 부마항쟁의 기억을 역사의 저편으로 유폐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조정관의 주장처럼, 5·18항쟁이 부마항쟁의 기억을 휩쓸어 버렸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은 5·18항쟁의 죽음을 관통하지 않고는 운동사적 맥락을 회복할 수 없다. 5·18항쟁이 부마항쟁에 대한 기억을 휩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마’를 향한 ‘광주’의 호명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결과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하고 만 것이다. 5·18항쟁의 맥락과 분리한 채, 부마항쟁의 항쟁사적 의의를 생성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998년에 편찬된 『부마민주운동사』는 “부마민주항쟁은 거기에 내포된 엄청난 역사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10·26정변의 그늘에 가린 채 한국 민주화 운동사의 한 장(章)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³⁵⁾고 진술한다. 부마항쟁이 5·18항쟁이나 6월항쟁에 비해서 항쟁사의 관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부마항쟁이 지역의 항쟁으로만 고립된 채 고사해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에 대해서도 지역적 고립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5·18항쟁의 의미는 6월항쟁을 통해서 복원되고 지금도 생성되고 있는 중이다. 홍콩과 미얀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5·18항쟁은 세계 시민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호명될 정도로 세계화·국제화의 문턱에 도달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5·18항쟁과의 운명적 결합에 실패했다. 부마항쟁은 모면한 죽음을 껴안고 여전히 1979년의 사건으로 머물고 있다. 부마항쟁과

3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387쪽.

분리된 5·18항쟁은 6월항쟁에 서울중심주의적으로 흡인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일견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이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던 것은 바로 광주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자행된 죽음 말이다. 6월항쟁의 뿌리는 5·18항쟁이었다.³⁶⁾ 5·18항쟁은 부마항쟁을 정신사적으로 호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한국민주화운동사적 맥락에서 피상적 차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부마항쟁은 시민의 기억 속에서 망각된 항쟁으로 평가되고 있고, 5·18항쟁 역시 극우세력의 색깔론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주장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은 '지역'의 사건에 머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광주는 6월항쟁 이후에도 5·18항쟁의 '지역화'에 대항하는 몸부림을 지속하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정신사적 결합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부마항쟁을 실질적으로 분리해놓은(혹은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부마항쟁)→5·18항쟁→6월항쟁'의 구도는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정신사적 일체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6월항쟁은 1980년대 운동사적 맥락을 총화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 4월혁명 이래 "처음으로 광범위한 민중연합이 형성되고 그 힘에 의해서 드디어 권위주의 체제가 부분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3·1운동→4월혁명→부마항쟁→5·18항쟁→6월항쟁>이라는 한국민주화운동사적 맥락에서 6월항쟁은 1980년대의 정점을 이룬다. 6월항쟁은 끝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를 성취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점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6월항쟁 이후 한국의 극우세력들이 광주의 전국화를 막기 위해 6월항쟁이 아니라 6·29선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전략을 추동해왔다. 더구나 이러한 전략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운명적 결합을 좌절시킨 '빨갱이 담론'의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정치를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는 고사되고, 5·18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6월항쟁

36) 김광식·양건·이근식·조희연·한상진, 「변혁의 80년대, 흐름과 평가」,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18쪽.

37) 위의 책, 14쪽.

에 양도된다. ‘부마’는 ‘모면한 죽음’을 망각한 채 항쟁사의 지역적 사건으로 매몰되고 광주라는 지역은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징성만을 떠안게 된다.

6월항쟁에서 ‘부마’와 ‘광주’를 지우고자 하는 도착적 발상은 서울중심주의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발상은 기묘하게도 진보학자 최장집의 논리와도 부합한다. 최장집이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의 민주화는 2단계 민주화로 정리된다. 1980년대 5·18항쟁이 민주화의 첫 번째 계기였다면, 1987년 6월항쟁은 그 두 번째 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진다. 5·18항쟁이 6월항쟁의 무혈민주화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18항쟁 그 자체는 민주화를 직접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실패한 항쟁이다. 따라서 6월항쟁이야말로 민주화를 가져온 뚜렷한 기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³⁸⁾ 5·18항쟁은 6월항쟁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5·18항쟁이 6월항쟁을 촉발시킨 매우 강력하고도 근원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지만, 5·18항쟁의 의미는 6월항쟁을 통해서 실현된다. 한국민주화운동은 4월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서 6월항쟁으로 귀결되는 흐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로써 부마항쟁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지역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5·18항쟁은 6월항쟁을 통해서만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 미완의 항쟁으로 기억된다. 광주는 불편하고 비극적인 학살의 장소로서 민주주의 강렬한 상징으로 남을 뿐이다. 6월항쟁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에 비해 역사적으로 차원이 다른 보다 완전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①

‘6·10민주화운동’은 반군사독재운동으로서의 ‘부마항쟁’과 ‘광주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앞선 ‘항쟁’들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단계적인 것이었다면 이 ‘운동’은 전국에서 연인원 4백만~5백만 명이 참가하여 3주일간이나 거리 집회·시위투쟁·농성투쟁이 계속되었다. 이 운동은 4·19운동과 같이 몇 개 중요 도시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20~3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어 주변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³⁹⁾

38) 최장집, 앞의 책, 116~117쪽.

②

지역과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단합해 군사독재의 폭압을 물리친 6월 민주항쟁의 10주년의 달을 맞고 있다.

6월 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항쟁 등으로부터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 스스로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다.⁴⁰⁾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최장집의 ‘2단계 민주화’ 구도는 위의 글 ①과 ②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단계 민주화’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이해하기에 효율적인 개념이지만, 최장집 스스로가 경계한 ‘서울로의 초집중화’가 한국민주화운동사에도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문제를 지니게 된다. 1993년의 칼럼인 ①은 6월항쟁이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199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하여 쓴 칼럼인 ②는 6월항쟁의 항쟁사적 기원을 ‘3·1독립운동’과 ‘4월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서 6월항쟁이 이 모든 항쟁의 도착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칼럼 ①이 부마항쟁과 5·18항쟁에 대해 “지역에 한정된 단기적인 운동”이라고 쓰고 있고, 칼럼 ② 역시 부마항쟁과 5·18항쟁에 대해 “지역과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단합”한 민주항쟁이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월항쟁에서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정동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6월항쟁이 전국적인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부산 또는 여타 도시의 역할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문제적이다. 부산의 6월항쟁은 부마항쟁의 반복이고, 광주의 6월항쟁은 5·18항쟁의 반복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6월항쟁은 무엇의 반복이었는가. 부마항쟁과 5·18항쟁 이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역동성을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6월항쟁 속

39) 강만길, 「6·10민주화운동을 되새기다」, 『한겨레신문』, 1993.6.10.

40) 이창복, 「6월항쟁 그후 10년」, 『한겨레신문』, 1997.6.7.

에는 그렇게 부마항쟁과 5·18항쟁이 살아 있다. 6월항쟁은 서울의 것이면서도 부산과 광주와 것이자, 여타 도시 혹은 전국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의 공간적 표상은 영화 『1987』에서 보듯 주로 서울만이 대중 속에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기억은 서울중심주의의 결과다.

부마항쟁과 5·18항쟁, 그리고 6월항쟁 사이에서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항쟁의 서울 참여 여부에 있다. 5·18항쟁에 대한 서울의 집단적인 반응은 알려진 바 없고, 부마항쟁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항쟁의 대오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10·26사태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부마항쟁, 5·18항쟁, 6월항쟁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서울의 항쟁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1987년 4·13 호헌 조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부마항쟁, 1980년의 5·18항쟁, 그리고 1987년 각 지역의 항쟁과 더불어 서울 역시 항쟁에 참여한다. 5·18항쟁의 전국화가 지난했던 이유는 신군부 정권의 통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인식론적 타성에 서도 찾을 수 있다. 6월항쟁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을 매개로 한 투쟁”이자 “광주의 전국화”라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매스 미디어를 통한 ‘5·18항쟁’ 보도가 전국 네트워크보다는 지방 네트워크에 한정된 것⁴¹⁾은 6월항쟁이 광주의 항쟁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정작 ‘광주’를 국지적인 차원으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는 현실을 말해준다. 부마항쟁의 처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결국 문제는 1987년의 6월항쟁이다. 6월항쟁의 역사는 어느덧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영화 『1987』(2017)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6월항쟁의 서사는 철저하게 서울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6월항쟁은 1980년 5·18항쟁의 비극적 결말을 해원(解冤)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격상되며 그것의 중심에 서울을 가져다 놓는다. 문재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6월항쟁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4·19나 광주항쟁은 다분히 우발적이

41) 정근식,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전망』 1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05, 81~82쪽.

거나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6월항쟁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국본’이란 연대기구가 결성돼, 그 지휘 하에 직선제 개헌의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시종일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화운동사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또 6월항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었지만, 나는 그 운동의 중심을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국본을 결성했고, 기간 내내 시위를 가장 치열하게 전개해 타 지역 시위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명동성당 농성이 해산돼 서울 등 타지역의 시위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부산에서 가톨릭센터 농성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치열하게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항쟁의 불꽃을 되살렸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항쟁을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6월항쟁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 부산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서울지역 중심으로 서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서울 중심 사고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민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3당 합당 이후 부산시민들 의식이 보수화함으로써 6월항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부산시민 스스로가 소홀히 하게 됐기 때문이다.

3당 합당 이전의 부산은,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끝내고 6월항쟁으로 5공 독재를 끝냈듯이, 부산이 일어서면 역사를 바꾼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충만했다. 그런 높은 시민의식 속에서 전통 야도(野都)로 바뀐 후, 오늘날까지 한나라당 일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⁴²⁾

문재인은 1987년 6월항쟁의 중심을 부산으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국본을 결성했고, 명동성당 농성이 해제되고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의 시위가 위축되었을 때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여 항쟁의 불꽃을 되살린 지역이 바로 부산이라는 것이다.⁴³⁾ 이는 6월항쟁의 지분을 박탈당한 부산

42) 문재인, 『운명』, 가교출판, 2011, 64~65쪽.

43) 한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부산의 ‘국본’(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은 1987년 5월 20일에 발족되었으므로, 5월 27일에 발족된 서울의 ‘국본’보다 빠르긴 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것이 5월 18일에 발족된 광주 ‘국본’이다.

시민 운동가 출신의 공치사로 폄훼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서울이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독점하는 동안 ‘광주’의 비극은 6월항쟁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부마항쟁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역 감정 정치를 통한 5·18항쟁의 ‘지역화’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이라는 과거 속에 내쳐진 상태이고, 5·18항쟁의 항쟁사적 의미 완성은 서울 중심의 6월항쟁이 전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민주화운동사는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가치와 의의가 서울의 관점에서 감산되고 배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19혁명’ 또는 ‘4월혁명’이라는 명칭이 함의하듯이 대구와 부산·마산의 4월혁명으로부터의 삭제다.

1979년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 하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모순과 폭압적인 억압에 대한 대학생들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시작되어 유신독재에 대한 시민 항거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킨 계기가 되었고,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인 5·18항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마항쟁과 5·18항쟁 사이에는 죽음을 매개로 한 운명적 결합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자행된 지역감정 정치는 광주와 부마의 운명적 결합을 와해했으며, 부마항쟁과 5·18항쟁을 지역적 사건으로 매몰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부마항쟁은 지역적 항쟁으로도 잘 기억되지 않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5·18항쟁은 그나마 지역화에 저항하는 기억 투쟁으로써 “6월항쟁의 뿌리”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긴 하다. 그러나 5·18항쟁의 항쟁사적 성취는 6월항쟁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광주는 피학살의 장소이자 죽

음의 상징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부마항쟁은 5·18 항쟁과 더불어 역사의 비극적 운명을 함께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화 운동사에서 충분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정신으로 끝내 이루어진 6월항쟁의 결실(87년 체제)이 서울중심주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다. 6월항쟁은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으로의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정치를 통해 부산과 광주가 분리됨으로써 지역의 항쟁사적 의미는 감산되어 왔으며 6월항쟁의 정신사적 의미는 서울중심주의적으로 전유되고 말았다. 그 결과 6월항쟁 속으로 흡인된 5·18항쟁과 달리, 부마항쟁은 3·15마산의거처럼 지역적인 사건으로 전락함으로써 충분한 역사적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심주의는 한국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작용한다.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지역의 의미가 퇴색해왔듯이 지역민주화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부마의 6월항쟁은 부마항쟁의 반복이고 광주의 6월항쟁은 5·18 항쟁의 반복이다. 따라서 6월항쟁은 부마와 광주의 운명적 결합이 이루어진 항쟁이다. 그러나 영화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6월항쟁은 서울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기억될 뿐이다. 부마항쟁의 항쟁사적 의미의 복원은 한국민주화 운동사를 바라보는 서울중심주의적 시각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부마항쟁과 5·18항쟁의 운명적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운명적 결합을 통해서만 부마항쟁과 5·18항쟁, 그리고 6월항쟁이 이룬 진정한 항쟁사적 의미의 총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논저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부마에서 광주까지』, 샘물, 1989.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3-1970년대 편』, 인물과사상사, 2003.
- 김광식·양건·이근식·조희연·한상진, 「변혁의 80년대, 흐름과 평가」,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1990.
- 김상봉,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09.
- _____, 「응답하는 도시-항쟁사의 능선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부마민주항쟁 학술총서2-부마민주항쟁 이후 지역 민주화운동과 민주정치의 과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기념사업회, 2021.
- 김태일, 「2·28과 1960년 봄 혁명」, 4월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10.4.19.
- 김환표, 「전북대학교 4.4시위와 4.19혁명」, 4월 학생혁명 50주년기념 전북대학교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10.4.5.
- 문재인, 『운명』, 가교출판, 2011.
- 문형민, 「중앙지의 지방의제 보도에 관한 연구-〈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사실 분석을 통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민병욱, 「부마항쟁의 문학사회학적 수용과 그 한계」, 『항도부산』 27호, 부산시 사편찬위원회, 2011.
- 박광주, 「부마와 광주의 전국화, 세계화」,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기획 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2000.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 1998.
- _____, 『부산민주운동사 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 안경환,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2013.
- 오제연 외, 『4월혁명의 주체들』, 역사비평사, 2020.
- 우찬제·이광호 편,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이석수, 「중앙일간지의 지방뉴스 취급과 보도 성향-조선·중앙·경향·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근식,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전망』 1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05.
- 정해구,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역사비평사, 2011.
- 조정관,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1세기 정치학회, 2009.
- 최영태, 「5·18항쟁의 명칭 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5.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하상복,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동북아연구』 35권 2호, 동북아연구소, 2020.
- 홍순권,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27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11.

3. 기타 자료

- 김태일, 「2·28운동은 1960년 봄 혁명의 출발」, 『매일신문』, 2017.2.27.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7022704383726766>,
검색일: 2023.7.11.)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1987.5.30.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190313>, 검색일: 2023.10.13.)

〈Abstrac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Seoul Centrism
- About the Fateful Union of Gwangju and Bu-Ma and its Reaction -

Park, Dae-Hyun

The role of the regio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s very important, but its value and significance has so far been reduced and excluded from Seoul's perspective. As a result, the Bu-Ma Uprising was disparaged as a regional struggle, and as the Gwangju Uprising was subordinated to the achievements of the June Uprising, the place called Gwangju remained a symbol of massacre and death. The reason for this result is that the fruits of the June Uprising (1987 system), which were finally achieved in the spirit of the Bu-Ma Uprising and the Gwangju Uprising, were evaluated and made meaningful from a Seoul-centric perspective. The June Uprising has the significance of being a nationwide uprising that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through the Bu-Ma Uprising and the Gwangju Uprising. However, the spiritual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June Struggle was monopolized by Seoul-centeredness through regional emotional politics that separated Bu-Ma and Gwangju. As a result, the Bu-Ma Uprising was regarded as a regional event like the March 15 Masan Uprising, and Gwangju's own historical achievements were subordinated to the Seoul-centric meaning of the June Uprising. Therefore, restoration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Bu-Ma Uprising will be achieved by overcoming the Seoul-centric view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at can be said to be possible only through the fateful combination of the Bu-Ma Uprising and the Gwangju Uprising.

* Key Words: Bu-Ma Democratic Uprising,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June Uprising, Seoul-centrism, Spring Revolution of 1960

·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5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24일
--